

“도민 불편 최소화” 전남도-시·군, 특별시 출범 준비 총력

대민서비스 시민생활 과제 등 점검 사전 안내·기대 효과 등 홍보 강화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2일 도청에서 제8차 전남·광주 행정통합 주요 과제 추진사항 점검회의와 도-시·군 부단체장 협력회의를 잇따라 열어 통합 특별시 출범에 대비한 행정서비스 연속성 확보와 도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점검했다. 황기연 행정부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통합과제 추진 상황과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전환 준비 사항, 대민서비스 운영계획 등 통합특별시 출범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주요 과제 추진사항 점검회의에선 대민서비스 제공 시스템 중단 일정과 안내표지판 정비 사항, 종합 홍보 방안 마련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협의했다. 행정안전부와 중앙부처, 한국 지역정보개발원, 시·군·구, 읍·면·동까지 연결되는 비상대응 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도-시·군 부단체장 협력회의에선 통합 이후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계획과 민원서비스 운영 방안을 점검하고, 민원 접수 중단 등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한 온라인 창구 운영과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했다. 전남도와 시·군은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방송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최초 광역 통합특별시 출범의 의미와 기대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도와 22개 시·군이 함께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황기연 행정부지사는 “통합과제별 세부 체크리스트에 따라 수시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과제의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에도 도민들이 불편 없이 새로운 행정체계를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 부지사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도와 시·군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상생·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매주 점검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보고하는 체계를 운영하며 주요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5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점검회의와 16일 국무총리 주재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 협조 사항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20조원 규모 행정통합 재정 인센티브의 사용 범위 자율성 보장과 하반기 조기 지급, 특별법에 따른 정부 권한의 체계적 이양 등을 요청한다. /김재정기자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12일 도청 정철실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도-시·군 부단체장 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DJ 미국 망명 시절 서한·입장문 등 공개

김대중노벨상기념관, 6·15 26주년 맞아 1984년 지방자치 제도 복원 필요성 강조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을 맞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 망명 당시 썼던 편지와 자료를 14일 공개했다. 지난 4월 도모히도 시노다 일본 국제대 교수로부터 기증받은 것으로 1984년 김 전 대통령이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에게 보낸 서한문과 한국인 권문제연구소 소식지에 게재된 입장문 ‘기묘에선 한국의 민주주의와 나의 견해와 제안’ 등이다. 김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나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어떠한 형태의 회담이든 환영한다. 그러나 남북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중국 소련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들이 직접적 회담의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이들의 협력 없이는 회담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통령은 “15개월 전 미국에 도착한 뒤 미국의 한국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지도자들, 언론, 학계, 종교계, 인권단체들과 접촉해왔다”며 “나의 관심은 개인적 정치적 미래에 있지 않고 내가 맡은 미국내 사명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지속할 것인가에 있다. 나의 가장 큰 소망은 조국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국민과 다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라고 귀국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을 맞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 망명 당시 썼던 편지와 자료를 공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 전 대통령이 1984년 8월6일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에게 보낸 편지, 1984년 4월 한국인권문제 연구소 소식지 '행동하는 양심'에 실린 입장문 '기묘에선 한국의 운명·나의 견해와 제안'.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제공>

지방자치 제도 복원의 필요성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3년간 박정희 및 전두환 정권에서 지방자치가 중단된 이유는 독재정권이 효과적인 억압을 통해 국민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시도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명분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조속한 지방자치의 복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입장문은 평화민주당 창당 등 향후 ‘김대중

정치’를 내다볼 수 있는 선언문이 됐고 1987년 대통령선거 당선과 햇볕정책, 2000년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오는 8월18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인간 김대중, 그 내면의 기록’ 특별전에서 관련 자료를 전시할 예정이다. /김재정기자

‘분청, 다리를 잇다’ 테마전 내일 개막

내년 1월말까지 무등산분청사기전시실 광주시 역사민속박물관은 오는 16일 오후 5시 북구 금곡동 무등산분청사기전시실에서 영호남 작가들의 분청사기 테마전 ‘분청, 다리를 잇다’ 개막식을 연다. 전시회는 1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전시는 분청사기의 전통을 오늘의 시선으로 새롭게 조명하고 영호남 지역이 공유해온 도자문화의 역사적 가치와 예술적 정체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했다. 분청사기는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도자 양식으로 지역마다 서로 다른 자연환경과 생활문화 속에서 독창적인 조형성과 미감을 형성해왔다. 지역별로 제작 환경과 표현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삶과 정신, 소박하면서도 자유로운 미의식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오늘날 영호남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분청사기 작품 80여점을 선보인다. 지역 간 문화적 연대와 예술적 교류의 의미를 짚고 분청사기의 재해석 가능성과 가치를 제시한다. 이부호 역사민속박물관장은 “영호남을 대표하는 분청사기의 흐름과 미적 가치를 한자리에 볼 수 있는 뜻 깊은 기회”라며 “분청사기를 매개로 지역과 지역, 전통과 현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문화적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은진기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안전·품질관리 교육

내일부터 공사 관계자 100여명 대상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오는 16-17일 이틀 간 광주교통공사와 인재교육원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사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안전·품질관리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

됐으며 건설공사 관계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강의는 건설안전 교육과 품질관리 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건설안전 교육은 문종섭 365안전법인인주 대표이사 초빙돼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주제로 강의한다. 품질관리 교육은 김병철 국토안전관리원 실장이 강사로 나서 ‘품질사고 및 품질관리 지적 사례’를 주제로 교육을 이어간다. /변은진기자

‘잊혀진 호국 영웅들’

나라를 구했던 손으로, 찬밥을 물에 말고 있습니다. 고지를 지켜냈던 영웅들은 이제 매일 끼니를 걱정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따뜻한 한 끼’로 보답할 때입니다.

6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요

월 2만원 국가유공자 도시락 선물하기 >



ARS 무기명 후원 060-708-1004 (1만원)

후원문의 1811-1004